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도입 갈림길… 노사정 합의가 관건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② 노동시간 특례의 딜레마

반도체 추격에 근로 유연화 요구 경영계, 고소득 연구직 특례 축구 근로시간 상한·연장수당 면제 쟁점 노동계, 장시간 노동·건강권 우려 노사정 네 차례 대화로 점점 모색 연내 입법 앞두고 제도 향방 촉각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첨단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White Collar Exemption)’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반도체 선진국 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메가특구에서의 ‘노동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거센 메모리 반도체 추격, 노동시간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

지난 13일 중국의 국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차세대 서비용D램 출시계획을 밝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5% 이상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후발주자로 기술력이 3~4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았던 중국 반도체 기업 호재 발표 한번에 우리 증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노동 특례 조항의 철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출렁였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성장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까지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노동 관행'으로 일한다고 알려진 중국 반도체 기업과,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는 우리 기업 노동 현실이 비교되며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영계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노동 규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논의 초기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3% 관리

자와 연구개발자면 메가특구내에서 일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사자 대부분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메가특구 내 기업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7월 발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과반수 기업은 메가 특구 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로 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를 러스터 포럼에 참석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칼라가 주로 일하는 지식 기반 사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블루칼라(생산직)가 밤낮 없이 일하며 일궈냈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화이트칼라의 혁신과 창의성에 달려 있다"며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 출퇴근 도장만 찍고 상사 눈치나 보게 만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어떤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사회적 대화' 시작… 연내 처리 위해 속도 내나

노사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머리를 맞대며 이견을 좁히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이번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방침을 못 박은 만큼, 사회적 대화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두고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 특구 노동 특례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메가특구에만 특별법으로 근로시간제 면제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엔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정해놓은 근로시간제를 특별법이라는 우회로 만들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에 대해 "고소득 연구 전문직에게는 노동 시간의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소득 연구 전문직이 공장에서 라인에서 일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그들에게 잔업 특근, 야간(근무를) 시켜서 중국을 이겨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다. 오히려 창의적인 일에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동기부여가 돼야 함에도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덧 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유가 급등에 수입물가 반등… 금통위 금리 결정 촉각

환율 3.4% 하락에도 수입물가 올라 9월 수입물가 1.7% 상승세로 전환 국제유가 28.1% 급등에 원가 압박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환율 하락의 완충 효과와 유가 발 물가상승 압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화 강세에도 유가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다시 올랐고, 소비자·근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원재료 수입가격은 뛰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1.7% 올랐다.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8

월 15.9%에서 9월 17.6%로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9%로 8월 3.1%보다 낮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에서 2.8%로 둔화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여전히 웃돈다.

◆환율 하락이 수입비용 완충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359.00원으로 8월 1406.30원보다 3.4% 하락했다. 달러로 표시된 수입가격이 같다면 원화로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88.75달러에서 113.71달러로

28.1% 뛰었다. 한은은 환율 하락에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광산품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계약에 쓰인 통화로 가격 변화를 집계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4.9% 올랐다. 원화 기준 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1.7%였다. 환율 하락이 해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준 흐름이다.

원유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운송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입 소비재 가격 하락은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전체 수입물가 상승률과 함께 품목별 가격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비용압력의 확산·지속성 관건

수입물가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기업의 재고와 계약 조건, 비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원재료 수입가격이 올랐다고 소비자물가가 같은 폭으로 즉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 상승이 이어져 기업의 원재료비 부담이 누적되면 국내 가격으로의 전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 수입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이어질 수 있다. 금통위의 물가 전망에서는 이러한 비용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이형일 “수출·투자 호조에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 기존 전망치 3.0% 웃돌듯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도 시사 IMF도 전망치 3.3%로 상향 조정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3%대 중반의 고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경부가 석 달 전 제시한 2026 경제성장률 예측치인 3.0%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말 'G20·G7 재무 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

행 연차총회'에 참석차 태국 방콕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새로운 외부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올해 성장률은)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중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3.4%, 3.5%, 3.6% 정도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올해 연간 GDP 증가율 전망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3분기 수출 및 설비투자 관련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했다. 또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8%, 2분기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이 정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관망하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제가 단순히 성장률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종전(2.6%·7월 전망) 대비 0.7%포인트(p)나 높여 잡았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제시 횟수를 기존 연말과 6월 말~7월 초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빠르게 바뀌는 데 따른 대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신하은 기자 godhe@

>> 1면 '반도체 이익...'서 계속

코스피 1만 시대 기대 반도체 편중 해소 과제

3분기 코스피 급락·대만은 상승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스퀘어·SK(주)·삼성물산 등 메모리 관련주를 제외해도 선행 PER이 8.4배라서 매우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JP모건은 "지배구조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고려할 때 1배에 가까워진 코스피의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도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며 "향후 6~12개월 관점에서는 AI 생태계와 한국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상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코스피 1만 시대'를 열려면 반도체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편중은 숫자가 말해 준다. 국민소득의 바탕이 되는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 2분기 26% 급증했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 증가율이 254%, 반도체를 빼면 5%다.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 중 60%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나온다. 그 간극 가운데서 국민 다수와 투자자가 느끼는 위화감이 큰 상황이다. 반도체에 의존해 온 증시는 3분기 맥없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가관지수는 61.66% 올라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36.87%였다. 승부가 뒤집힌 건 올 3분기 이후다. 반도체 업황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 속에 이 기간 코스피가 31.95% 하락한 반면 대만 가관지수는 1.51% 상승했다.